

<세계경기 불황의 원인(II)>

수요 감소따른 경기불황 타개책 “기술혁신 앞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개인소비 현황을 보면, 일본은 유럽·미국과 비교해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고, 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도 어떤 나라이든 둔화되는 경향에 있다.

이 원인은 생산성 상승율의 둔화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생각할 때 생산요소인 설비투자, 연구개발,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여도 상품이 생활필수 요구에 적합 구입하지 않으면, 생산성(생산성은 자본장비율과 틀려 노동 시간당 실제로 판매되는 일에 의해 실현된 부가가치를 표시)은 상승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설비투자, 노동투입,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면, 생산성이 그만큼 하락할 뿐이고 자원 낭비가 된다.

현 시점과는 달리,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미국을 향한 Catch Up 과정에 있었다. 그것은 생산성 향상이 비교적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를 보면 △ 일본경제가 지향해야 될 현실적인 표준양식이 있고 △ 원재료·기술·자금이 해외에서 저가격으로 도입 가능하며 △ 국민은 부흥·Catch Up으로 의욕에 불타 있고 △ 양질의 노동력은 내부(농촌)에서 저가 조달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 Catch Up 한 현재, 새로운 경제성장을 개척하는 곤란한 요인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수십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후의 성장산업은 많은 두뇌집단이 말하는 것 처럼, 멀티미디어·태양광전자·전기자동차·주택개발·건강지원산업이 아닌, 생활필수 요구에 대응한 저가격의 신상품을 공급 가능한 산업일 것이다.

일본은 40년경, 전쟁수행을 위해 관·민이 유착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평등을 장려하고, 계열에 의한 경제와 생활의 안정 등을 도모하면서 최대한의 자원을 전쟁에 투입한다고 하는 40년 체제가 돌연 발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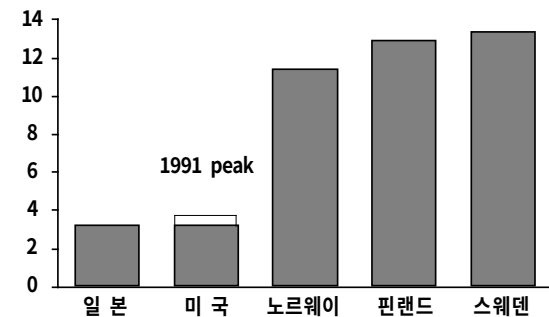
이것들은 전후부흥, Catch Up하는 국민적 열망이 강한 시기에 오히려 강화되었다.

다시말해, 구 사회주의 국가적인 계열거래, 관·민유착형의 생활안정 집단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집단주의는 현재 보여지는 원활하지 못한 대출, 고지가·고임대로, 고원재료 가격, 고임금과 어울려 생활필수 요구에 대응하려고 하는 개개의 야심적인 기업가의 발생·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이때문에, 여러가지 관행의 강직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후 경제성장마저 도모할수 없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과제의 해결이 상

【그림1】 세계 각국의 은행위기



주) 연대채권의 정의

1. 스웨덴: 60일 이상 금리 미지불
2. 미국, 핀란드, 노르웨이: 90일 이상 금리 미지불
3. 일본: 180일 이상 금리 미지불

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후의 일본 경제성장은 상당부분 낮게 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많은 일본인 경제학자는 이후의 잠재성장률을 3.5%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그것과는 달리 2000년 시점에서 만일 가계가 채무누적 상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연대채권 처리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은 1.5~2%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히려, 불황이 심각해지고, 일본의 높은 가격 수준이 미국 수준까지 대폭 하락한다고 하는 경제 대조정을 겪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발전의 싹이 튼다고 생각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일본의 경영과제

전후의 일본경제는 생활필수 요구 상품을 종래의 가격과 비교해 대폭 인하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평대한 수요를 자극해 발전해 왔다.

기업은 원재료 조달, 판매, 서비스 제공, 제조방법 등에서 대폭적인 경영혁신을 도입함으로써 제품가격 인하와 더우기 그것을 상회하는 비용 감축에 의해 큰 이익을 계상해 왔다. 이 과정을 지속시키려면, 새로운 생활필수 요구 제품을 저가로 제공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비용 감축이 가능한 경영혁신이 항상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상품을 개발하면 보급·포화에 10~15년 정도 걸리며, 이후 갱신 수요가 있지만, 규모 증가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규모의 수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후 10~15년 정도는 경영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30년 정도 경과해 다른 분야의 생활필수 요구 상품이 출현되면, 기존상품은 시장에서 상대적 또는 절대적인 지위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은 대략 60년으로 소멸한다. 이때문에, 경제성장도 60년 정도의 리사이클을 그리는 생각이 가능하다.

경영자는, 생활필수 요구를 찾아내고, 종래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일에 의해, 기업 및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40년 이후 일본적 경영은 계열, 주식 상호보합, 종업원 고용유지, 관·민 유착 등에 의해 집단적 생활안정 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이 안정성을 배경으로 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를 과중하게 이루었다. 이 기업성장 과정은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중국·브라질 등이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Catch Up 의지와 선진국 시장의 개방(어느 정도 외화의 획득기회)이 있다면, 어떤 국가라도 가능할 것이다.

【표1】 일본의 신용수축 현황

(단위 : 1조엔, 배)

구분	잔 액			잔액순증가			명목 GNP		마살의 K	
	은행권	M2	화폐 승수	은행권	M2	화폐 승수	실액	순증 가액	평균	증가
1984	22.1	289.7	13.1	-	-	-	301.0	-	0.96	-
1985	23.4	314.9	13.5	1.3	25.2	19.4	321.6	20.6	0.98	1.22
1986	26.2	343.9	13.1	2.8	29.0	10.4	335.8	14.2	1.02	2.04
1987	28.6	380.9	13.3	2.4	37.0	15.4	350.5	14.7	1.09	2.52
1988	31.5	419.7	13.3	2.9	38.8	13.4	373.7	23.2	1.12	1.67
1989	36.7	470.0	12.8	5.2	50.3	9.7	399.0	25.3	1.18	1.99
1990	37.3	505.0	13.5	0.6	35.0	58.3	427.5	28.5	1.18	1.18
1991	38.0	516.3	13.6	0.7	11.3	16.1	454.0	26.5	1.13	0.41
1992	38.1	515.5	13.5	0.1	△0.8	8.0	469.2	15.2	1.10	△0.05

【표2】 미국의 신용수축 현황

(단위 : 100억달러, 배)

구분	잔 액			잔액순증가			명목 GNP		마살의 K	
	은행권	M2	화폐 승수	은행권	M2	화폐 승수	실액	순증 가액	평균	증가
1984	16.1	226.7	14.8	-	-	-	377.7	-	0.60	-
1985	17.3	248.3	14.4	1.2	21.6	18.0	403.9	26.2	0.61	0.82
1986	18.6	270.7	14.6	1.3	22.4	17.2	426.9	23.0	0.63	0.97
1987	20.1	281.4	14.0	1.5	10.7	7.1	454.0	27.1	0.62	0.39
1988	21.5	299.0	13.9	1.4	17.6	12.5	490.0	36.0	0.61	0.49
1989	22.6	310.6	13.7	1.1	11.6	10.5	525.1	35.1	0.59	0.33
1990	25.0	320.4	12.8	2.4	9.8	4.1	552.2	27.1	0.58	0.36
1991	27.0	330.1	12.2	2.0	9.7	4.9	567.8	15.6	0.58	0.62
1992	29.7	337.2	11.4	2.7	7.1	2.6	595.1	27.3	0.57	0.26

주) 마살의 K의 평균은 잔액 M2를 명목 GNP로 나눈 것이며, 증가분은 잔액순증가 M2를 명목 GNP 순증가액으로 나눈 것임.

【표4】 독일의 신용수축현황

(단위 : 100억DM, 배)

구분	잔 액			잔액순증가			명목 GNP		마살의 K	
	은행권	M2	화폐 승수	은행권	M2	화폐 승수	실액	순증 가액	평균	증가
1984	10.0	99.5	10.0	-	-	-	175.1	-	0.57	-
1985	10.4	107.4	10.3	0.4	7.9	19.8	182.3	7.2	0.59	1.10
1986	11.2	114.4	10.2	0.8	7.0	8.8	192.5	10.2	0.59	0.69
1987	12.4	121.3	9.8	1.2	6.9	5.8	199.1	6.6	0.61	1.05
1988	14.3	128.3	9.0	1.9	7.0	3.7	209.6	10.5	0.61	0.67
1989	14.8	134.8	9.1	0.5	6.5	13.0	222.4	12.8	0.61	0.51
1990	15.9	159.8	10.1	1.1	25.0	22.7	241.8	19.4	0.66	1.29
1991	17.2	170.1	9.9	1.3	10.3	7.9	261.3	19.5	0.65	0.53
1992	20.1	183.5	9.1	2.9	13.4	4.6	277.2	15.9	0.66	0.84

【표5】 프랑스의 신용수축 현황

(단위 : 100억프랑, 배)

구분	잔 액			잔액순증가			명목 GNP		마살의 K	
	은행권	M2	화폐 승수	은행권	M2	화폐 승수	실액	순증 가액	평균	증가
1984	19.9	310.7	15.6	-	-	-	436.2	-	0.71	-
1985	20.7	331.8	16.0	0.8	21.1	26.4	470.0	33.8	0.71	0.62
1986	21.4	357.1	16.7	0.7	25.3	36.1	506.9	36.9	0.70	0.69
1987	22.2	380.4	17.1	0.8	23.3	29.1	533.7	26.8	0.71	0.87
1988	23.6	401.6	17.0	1.4	21.2	15.1	573.5	39.8	0.70	0.53
1989	24.6	411.2	16.7	1.0	9.6	9.6	616.0	42.5	0.67	0.23
1990	25.9	421.1	16.3	1.3	9.9	7.6	650.6	34.6	0.65	0.29
1991	25.8	417.5	16.2	△0.1	△3.6	(36.0)	674.7	24.1	0.62	△0.15
1992	25.9	-	-	1.0	-	-	698.7	24.0	-	-

이들 국가의 고도성장을 보면, 일본인의 자질이 특히 뛰어나거나, 일본적 경영이 보편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생활안정을 위한 집단 지향과 투자 편중은, 구소련·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투자의 비효율·낭비를 산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것은 30~40년이나 투자편중, 관·민유착의 생활안정 집단화, 자원낭비, 생활경시가 계속 이어져 경제가 깨졌기 때문이다. 구사회주의국의 경우에는 군사지출 낭비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력 낭비(장시간 노동)가 있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강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 생산성(노동 시간당 부가가치액)은 미국의 약 80%, 독일의 90% 정도에 지나지 않고, 기계산업만이 간신히 미국의 115%, 독일의 130%가 된다.

더우기, 일본은 계열내에서 품질유지를 명목으로 하는 호혜적인 고가격 상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물가 수준이 높다. 이때문에, 원래부터 낮은 제조업의 생산성(부가가치=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생활수준(구매력 평가에 의한 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더우기 10% 정도 낮아진다.

그리고 제조업 보다 더 생산성이 낮은 타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구매력 평가에 의한 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성(1노동 시간에서 구입 가능한 생활수준)은 미국의 60%, 독일·프랑스의 7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영국은 정부부문의 확대, 노동시장의 경직화(선임권 제도 등), 가격인하 경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피하는 등의 경영자 의식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왔으나, 일본 경제보다는 20% 효율적이다.

【표3】영국의 신용수축 현황

(단위 : 10억파운드, 배)

구분	잔 액			잔액순증가			명목 GNP		마살의 K	
	은행권	M2	화폐 승수	은행권	M2	화폐 승수	실액	순증 가액	평균	증가
1984	9.2	130.8	14.2	-	-	-	325.5	-	0.40	-
1985	9.8	145.5	14.8	0.6	14.7	24.5	357.3	31.8	0.41	0.46
1986	13.4	178.4	13.3	3.6	32.9	9.1	384.9	27.6	0.46	1.19
1987	14.2	343.5	24.1	0.8	165.1	206.4	423.5	38.6	0.81	4.28
1988	15.3	403.1	26.3	1.1	59.6	54.1	471.3	47.8	0.86	1.25
1989	16.2	481.5	29.7	0.9	78.4	87.1	151.3	44.0	0.93	1.78
1990	16.4	533.5	32.5	0.2	52.0	260.0	550.6	35.3	0.97	1.47
1991	16.7	543.7	32.6	0.3	10.2	34.0	574.4	23.8	0.95	0.42
1992	18.0	577.4	32.1	1.3	33.7	25.9	596.2	21.8	0.97	1.54

【표6】이태리의 신용수축 현황

(단위 : 1조리라, 배)

구분	잔 액			잔액순증가			명목 GNP		마살의 K	
	은행권	M2	화폐 승수	은행권	M2	화폐 승수	실액	순증 가액	평균	증가
1984	41.2	501.8	12.2	-	-	-	725.8	-	0.69	-
1985	45.0	557.5	12.4	3.8	55.7	14.7	810.6	84.8	0.69	0.66
1986	48.2	610.8	12.7	3.2	53.3	16.7	899.9	89.3	0.68	0.60
1987	52.6	663.2	12.6	4.4	52.4	11.9	983.8	83.9	0.67	0.62
1988	57.0	721.4	12.7	4.4	58.2	13.2	1,091.8	108.0	0.66	0.54
1989	67.5	805.5	11.9	10.5	84.1	8.0	1,193.5	101.7	0.67	0.82
1990	69.3	885.1	12.8	1.8	79.6	44.2	1,312.1	118.6	0.67	0.61
1991	76.2	1,003.1	13.2	6.9	118.0	17.1	1,426.6	114.6	0.70	1.03
1992	84.8	-	-	8.6	-	-	1,507.2	80.6	-	-

그리고, 내외 가격차(구매력 평가÷환율)를 보면, 이것은 국내가격÷무역재가격의 수준을 표시하고 있고, 외국과 비교해 5~40% 비율이다. 환율변동의 큰 차이는 있지만, 생활로의 자원배분을 희생시키고, 수출로의 자원배분을 행하고 있고, 넓은 뜻에서 수출 덤핑이라고도 말해진다.

경영자는 출구가 없는 불황을 앞에 두고 생활필수 요구의 대응해 경쟁촉진, 비용절감, 제품가격 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어떤 내외의 경영자원을 도입해 국내소비를 자극하고, 경영 내지는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 거래, 계열내 거래에 있어서 Market Mechanism의 격렬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영업부문은 자사상품과 계열상품이라도 고가인 것은 판매되지 않고, 타 기업과 타계열에서 조달된 저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마케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람, 상품, 돈, 정보, 기술 등 어떤 경영자원에 대해 사내·계열거래의 시장 경제화를 도모하는 일이 과제가 될 것이다.

기초소재산업(철강·화학·세멘트 등)은 전기 일본적 경영의 대표적이고, 가전·자동차·의약품·

화장품은 후기 일본적 경영의 대표라 할 수 있다. 후자가 전자와 다른 점은, 유통과 소매 부문을 거의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고, 생활필수 요구를 흡수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매출규모가 크고, 동시에 이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설비투자자 연구개발 투자는, 경제성장의 원천이라고 말해지고 있으나, 이와같은 생각은 △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물적으로 보아 접촉하는 일이 가능하고 이것을 정비하는 일이 경영혁신에 있다고 믿기 쉽고 △ 설비·원재료·노동력 등의 경영자원을 직접 지령할 수 있고 정비가능하며 관리한다고 하는 형식 등에 기인하고 있다.

발전도상국과 구 사회주의국은 △ 타국으로의 경제의존을 싫어하고 자급화를 지향하며, △ 기념물적인 설비를 건설하려는 경향이 있고, △ 이 결과 설비는 비효율·낭비가 되기 쉬우며, △ 이때문에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저가격·품질일정·안정공급이 도모되어 진다면 자국과 자사에서 설비투자, 원료 자급, 노동력 자급, 연구개발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 수요가 공급을 낡는 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공급자가 대규모의 자금을 사용, 장시간 걸리는 정비를 행해 공급능력을 높이는 것보다도, 시장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영자원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동시에 성장 촉진적이다.

그리고, 시장요구는 소비자에 가까운 중소 영세기업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선진국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된 가전·자동차도 그 발생·발전기는 이름도 없는 단순한 간이공장에 가까운 기업의 설비가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에도 시장요구와 효율화를 목표로 해 현장주의·현지주의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7】 경제성장의 요인분해

$$\text{경제성장} = \text{자본투입량} (= \text{가동율} \times \text{기계·설비스톡}) \times \text{노동투입량} (= \text{노동시간} \times \text{취업자수}) \times (\text{전요소})^{\text{생산성}}$$

$$\log(\text{GNP}) = \log(= \rho \times K) \times \log(h \times L) \times \log(T)$$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생산=매출)이 성립한다

공급요인
설비투자자와 연구개발의 질 향상은 대다수 K의 증가에 연결된다

공급요인
취업자 질 향상은, 노동투입량에는 그다지 반영되지 않고, 생산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수요요인
① 상품이 생활필수요구에 적합한지(팔릴수 있는지)에서 결정된다
② 소위 「기술진보율」이라 하는 말에 속아서 설비투자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공급요인설은 문제가 있다

불황과 대책

실물경제의 불황은 이후 고용조정·임금억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악화되고, 그리고 금융경제의 불황은 연대채권 처리·금융기관 정리가 본격화되면 악화될 것이다. 이와같은 사태에서는 어떤 재정금융 정책이든 거의 효과가 없다. 금융정책에서는 기존채무의 강제적 면제와 마이너스 금리를 붙이면, 실물경제 회복에 조금 효과가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정책 발동은 채권자(은행 등)를 대혼란으로 빠트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익을 축적시킨후 Case By Case 에 의한 채권상각을 행하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사실상 채무를 면제하는 이외의 방법은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는, 차입자가 자금을 경제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며, 이자 이익을 올리는 것을 막지 않고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전해줄 필요가 있기도 하다. 또 차입 수요가 무한대로 되기도 하고, 금융자산 가격과 토지가격이 대폭 하락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부는 재정정책에 대해 민간의 비효율·자원낭비 이상으로 비효율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공익사업 등을 늘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으나, 저소득자는 세

금이 없어도 감세액이 소폭이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도입에 의한 소득유지를 도모, 소비를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경기의 본격적 악화를 막는 경우 △ 가격지지 △ 산업보조와 기업보조 △ 개인의 소득보전과 실업수당 지급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재정 지출액이 적게 끝나기 때문이다. 가격지지와 산업·기업보조는 비효율적인 산업과 기업을 도태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처럼, 정책면의 어떤 노력을 하여도, 경기가 순조롭게 회복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경기 악화의 정도를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로 생각된다. 대공황시 미국의 뉴딜도 경기회복 효과를 거의 추진하지 않았으며, 본격적 회복은 오랜 정체가 지속된 후의 자립적인 소비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일본의 불황은 이후 본격화되고 △ 종래 보여진 수량기준의 감소는 94년 중반이후 종료되고 그후 3~4년간 밑바닥세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 가격의 하락은 이후 본격화되어 3~4년 가깝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견해를 달리하면 이 시련은 40년 이후, 60년이나 걸쳐서 계열·주식균형, 관·민유착에 의한 비효율, 고가격 체계를 동반한 사회주의적 생활안정 기구가 파괴되고,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고가격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가격은 절정일 때와 비교해 30%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불황은 계속될지 모른다. 도중에서 가격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아도 그후의 경기회복이 순조롭지 못하고, 결국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주가·지가도 PKO와 회사결산의 외관을 잘 꾸미기 위해 친자기업간·계열기업간 거래에 의해 아직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8】 실질경제성장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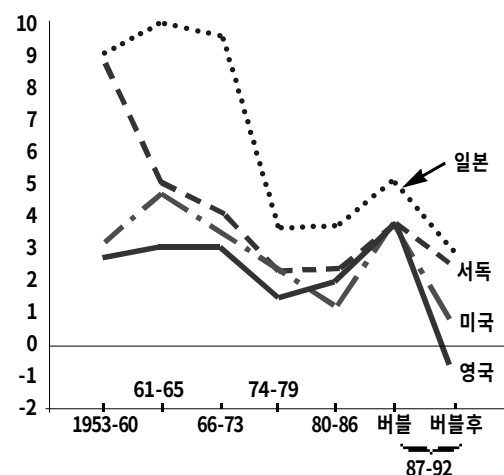
(단위 : 연평균%)

역년	일본	미국	영국	구서독	프랑스	이태리
1953~60	9.0	3.3	2.8	7.9	4.5	5.5
61~65	10.0	4.6	3.1	5.0	5.8	5.1
66~73	9.8	3.8	3.1	4.2	5.4	5.4
74~82	3.6	1.6	1.1	1.5	2.4	2.4
83~86	3.7	4.5	3.4	2.1	1.6	2.3
87~92	4.2	2.1	1.5	3.1	2.4	2.4
불황기간	87~90	87~89	87~89	88~91	88~91	88~91
	4.9	3.6	3.8	3.9	2.7	2.6
불황후기간	91~92	90~92	90~92	92	92	92
	2.7	0.6	0.7	1.5	1.3	0.9
최근 6년간	87	4.1	3.5	4.8	1.4	2.2
	88	6.2	4.5	4.2	3.7	3.8
	89	4.6	2.8	2.3	3.3	3.6
	90	4.8	0.9	0.8	4.7	2.6
	91	4.0	1.2	2.5	3.7	0.7
	92	1.3	2.1	0.5	1.5	1.3
예측	93	1.0	1.8	1.4	2.0	0.5
	94	0.5	1.8	1.5	1.0	0
	95	0	1.9	1.5	0.3	0.3
	96	0.5	1.9	1.5	0	1.0
	97~2000	1.5	2.0	1.5	1.5	1.5

자료) OECD 통계

【그림2】 실질경제성장률(연평균)

(단위 : %)



일본의 주가수익율(주가÷이익)은 93년 10월 90배정도로 유럽·미국의 약 50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더우기, 이후 기업이익이 줄기 때문에 주가는 심각한 상황으로 반전해 93년 10월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지가도 이후 대폭 하락하여 선진국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공황시에도 광공업 생산의 저하는 3년반 걸렸다. 이러한 불황에서 일본의 광공업 생산 저하는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 대공항은 거의 순수한 시장경제의 자립적 조정 프로세스였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적인 관·민유착·전시수행 경제(전쟁수행 목적이 그후 부흥목적·Catch Up 목적으로 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에서의 조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구소련·동유럽이 경험한 것처럼 혼란과 혼미가 더욱 가중되나 기업가정신과 localisation(현지·현장 중시주의)로 건디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

【표9】 OECD의 소비구매력 평가수준 추이(물가수준은 각국 100으로한 경우의 일본의 물가수준)

구 분	1985				1988				1990				1991			
	구매력 평 가	환 율	구매력 평 가	환 율	구매력 평 가	환 율	구매력 평 가	환 율	구매력 평 가	환 율	구매력 평 가	환 율	구매력 평 가	환 율	구매력 평 가	환 율
미 국	218	239	91	201	128	157	192	145	132	190	135	142				
독 일	84.8	81.3	104	85.0	72.9	117	84.9	89.6	95	84.7	81.5	104				
프 랑 스	29.0	26.6	109	27.0	21.5	126	26.6	26.6	100	26.6	23.9	111				
영 국	369	306	121	331	228	145	296	258	115	288	238	121				

주) 물가수준=(구매력평가)/(환율)

자료) 경제기획청(물가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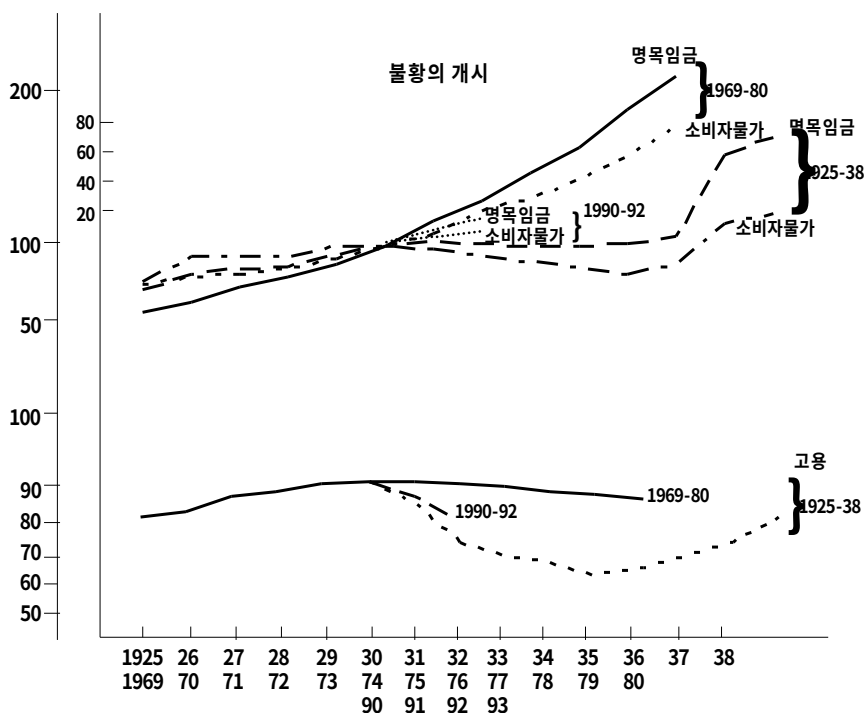
미국이 대공항을 막지 못했던 것은 명목임금 저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소비부진을 불렀기 때문이다. 명목임금이 저하되면 물가수준이 더욱 하락,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소비를 억제한다.

이것은 △ 단순히 화폐배일(소비자는 명목임금에 반응해 소비를 결정한다)에 멈추지 못하고, △ 기왕의 차입잔고에 대해 명목수치에서 강제적으로 반제를 요구당해 구매력이 대폭 저하되기 때문이다. 채무구제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근의 명목임금과 고용동향을 보면, 1차·2차 석유위기때 보다 대공항시에 가깝고, 직관적으로 말하면, 선진국 경제가 장기불황에서 일어서는 시점은 2000년을 넘을지 모른다. 이 사태에 있어 즉흥적인 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으나, 소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소득수준 보장, 고용보장, 채무경감책 정도가 간신히 경기악화 정도를 일부 느슨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은 각오하는 편이 좋다.

경제는 성숙상품에 대해 기존 권익을 고집하는 기업가 정신의 고갈에 따라 약 50~60년의 장기 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시 경제를 회복으로 이끄는 것은 경영혁신이지 기술혁신은 아니다. 기술혁신은 경영혁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림3】 임금동향(1925~36년/1969~80년/1990~92년)



【표10】 동증·주가수익률

연	배 율
1984	27.41
1985	31.92
1986	49.80
1987	70.04
1988	63.75
1989	65.98
1990	52.66
1991	45.28
1992	44.82
1993.9월	89.00

주) 주가수익률 = $\frac{\text{주 가}}{\text{기업이익}}$ (배율)

더구나, 국제적인 정치패권은 약 100년의 순환을 가지며, 이 속에 50~60년의 장기 경제순환이 2가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에 대한 내외 정치학자와 경제학자의 해석은 불충분하고 틀린 견해를 가진 것도 있다고 생각된다.

포인트는 △ 일반대중의 발언력이 강하고 납세자의 저항이 강한 나라에서 경비절약을 위해 어쩔수 없이 돈이 드는 육군이 아닌 비교적 돈이 들지않는 그리고 경쟁자가 적은 해군을 정비하며 △ 이들의 나라(포르투갈 · 네덜란드 · 영국 · 미국)는 국제정치의 중심(유럽대륙)과는 동떨어진 주변의 해군 국가에 지나지 않고, △ 정치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군비는 크게 되지 못하고 자원의 낭비에서 벗어나는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을 투입했으나 △ 일반대중의 소비증대에 실패하면 경제규모가 확대되지 못한다. 이때문에 결국 비교적 경장비의 군비마저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해, 「정치패권」의 발상이 원래부터 틀렸었고, 「일반대중에게 지지받는 국민 경제의 발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대문명, 그리이스 · 로마 문명의 부흥과도 관계된다.

영국은 패권을 제2차 대전시에 미국에 양보했으나, 그 원인은 1873-1896년의 불황으로 명목임금 저하를 막지 못하고, 이것이 소비감소를 가져오고 경제성장의 확대를 저해했다고 생각되고 있다.

미국 · 영국은 8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취업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대다수는 판매와 조수 등의 서비스업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남성도 포함한 평균 명목임금 수준은 하락했으나 거시적 경제 전체의 명목수요 수준은 오히려 상승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 사회 진출에 의해 발언권이 강화되고, 생활 필수 요구 상품의 개발이 보다 쉽게 되기 때문에, 이후 중 · 장기적인 미 · 영의 경제성장률은 일본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전후 50년이 지나 정치대국은 고사하고 경제대국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일본적 경영과 일본적 관민유착 체제가 50~60년을 대폭적으로 상회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기본적 이념이 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보통성, 정당성이 없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지 모른다.

<화학저널 1994/5/1>